



국토계획평가제도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자치계획권 보장을 중심으로



허유경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책임연구위원)





국토계획 평가제도란?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국토관리 원칙과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을 점검하는 제도

1

균형발전

지역 간 격차 완화

2

경쟁력

국토의 효율적 이용

3

친환경

개발과 보전의 조화

핵심 특징

- **사전적 평가:** 계획의 효과가 아니라 수립 중인 계획을 점검
- **자체·협력적 평가:** 계획수립권자와 전문가·정부부처가 함께 참여
- **종합적 평가:** 균형성·효율성·친환경성·적정성을 함께 검토



14년 운영, 무엇을 남겼나

235 건

2012년 5월 ~ 2025년 12월
국토계획평가 완료

70.6 %

도시·군기본계획
166건으로 전체 평가의
절대적 비중

성과

- ☑ 국토관리 기본이념 반영
- ☑ 상위·유관계획과 정합성 확보
- ☑ 도시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계획 수립
- ☑ 객관적 분석에 기반한 계획 유도





승인권은 지방, 평가권은 중앙

시·도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승인

중앙정부

국토계획평가
사전 검증·통제

핵심 문제

이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치는데도, 별도의 중앙 평가와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는다.

승인권 이양의 취지를 약화시키는 중복 규제



평가 절차는 너무 길고 복잡하다



수개월에서 1년 이상

평가 과정이 계획 수립 일정에 추가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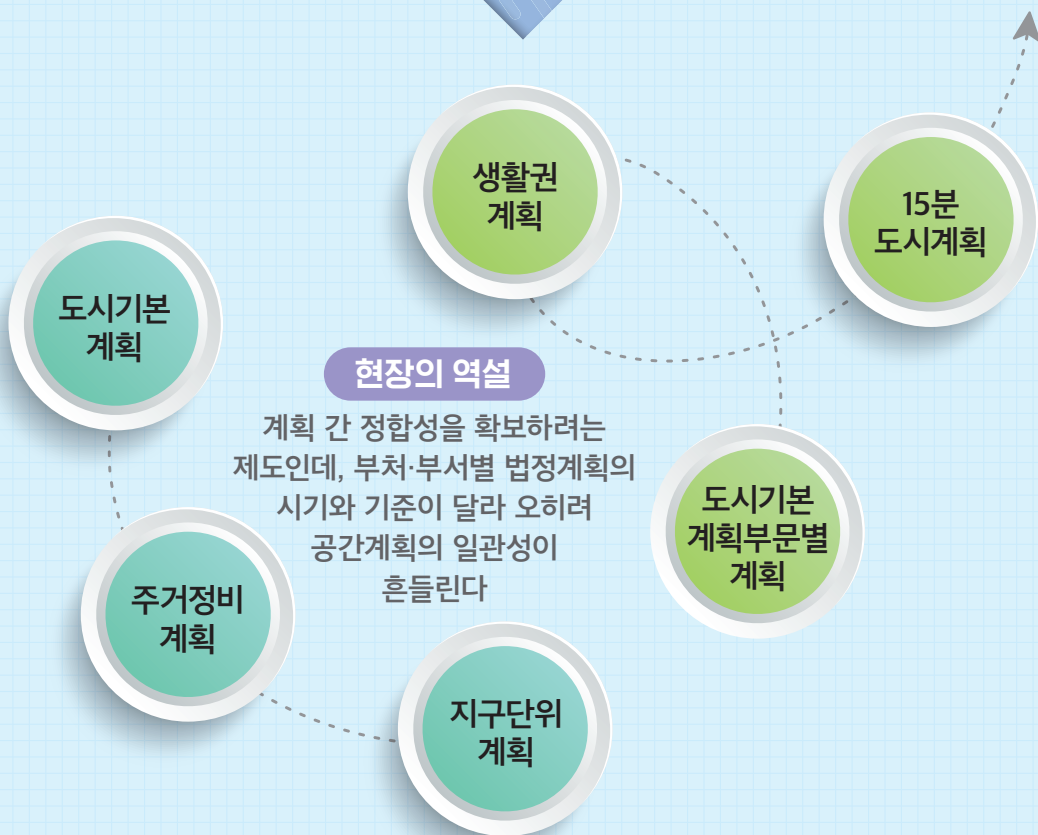
중앙·지방 간 견해차가 생기면 전체 계획 일정에 차질 발생

또 하나의 문제

‘경미한 변경’의 면제 기준이 모호해
계획 내용의 단순 변경도 기계적으로 평가



법정계획은 늘지만, 서로 맞지 않는다





국토계획평가 권한을 사·도로 이양



도시·군기본계획 등을
평가 대상에서 제외

승인권과 평가권을 일치시키자

지방정부

지역 특성에 맞는
계획 수립·평가

중앙정부

상위계획 정합성
모니터링·컨설팅





‘경미한 변경’ 면제 기준을 명확하게

평가 면제 예시

공간구조

변화 없음

목표 인구

실질적 변경 없음

계획 방향

핵심 내용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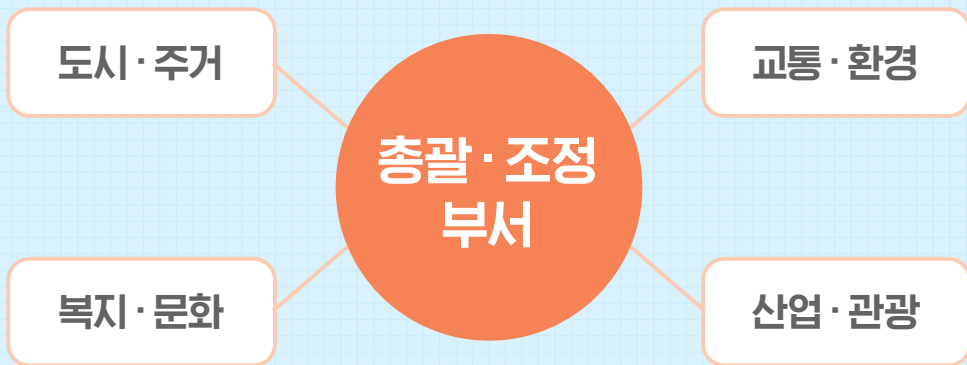
필요한 조치

업무처리지침에 구체적으로
규정 면제 사유를 예시화해 지방정부의
판단 혼선과 행정비용을 줄여야 한다.

불필요한 평가를 줄이고, 중요한 계획에 집중



법정계획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통합 가이드라인의 역할

- ① 계획 수립 순서 조정
 - ② 생활권 기준 통일
 - ③ 부서 간 상충 해소
- 수백 개 중장기 계획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실행되도록 관리



결론

자치계획권을 보장하는 3가지 제도 개선

01

평가권 이양

도시·군기본계획 등은 시·도가 자율적으로 평가

02

절차 간소화

경미한 변경의 면제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

03

계획 통합관리

법정계획 총괄부서와 통합 가이드라인 마련

중앙의 통제보다, 지방의 책임 있는 자율성을